

전남경찰 주요 사건 초동수사 부실 질타

전남경찰청 국감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지난 4월 발생한 의붓딸 살인 사건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의 부실한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반면 지난 7월 취임한 신임 김남현 전남청장은 이례적으로 민생안전과 치안유지에 최선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10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전남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대응을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보고서에는 경찰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섬 지역 관사 건립·한명도 없는 프로파일러 배치하라" 촉구
3년 연속 체감 안전도 전국 1위 등 이례적 칭찬 이어져 눈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의붓딸 살인사건 당시 목표경찰서에 최초로 성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방치했고 피해자는 신고 후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한 뒤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1차 조사에서 성폭력을 짚어내지 못하고 술 취한 학생이 112에 신고된 것으로만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수사에 대한 전남청의 대응에 잘못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남청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 등 미제사건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프로파일러가 단 한명도 없다"며

서 "전남 내 다양한 중요범죄 해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하루빨리 프로파일러를 채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거문도 삼산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고층에서 3시간 이상 배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는 자료를 봤다. 이런 경찰이 아니라 뱃사람"이라며 "우선적으로 직원을 관사부터 짓는 것이 치안을 위한 1순위"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섬이 많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도 많은 듯 하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파출소부터 파악해 예산을 올리길 바란다"며 "행안위 위원들도 발벗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은 "광주권과 먼 거

리에 있는 지역은 6-10일 정도 소규모 관사를 구축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현 전남청장은 "해남, 완도, 진도 등 8개 정도 관사를 운영하지만 아직도 해안 중심으로 관사가 부족하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국감에선 이례적으로 지난 7월 취임한 현직 청장에 대해선 질타 대신 격려성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정인화 의원은 "김(남현)청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생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가 많다"고 극찬했고, 이번 국감에서 감사 반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이재익 의원은 "전남경찰청이 3년 연속 체감안전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김 청장께선 지금까지 앞으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반음식점 노래·춤 불법영업 광주·전남 5년간 58건 적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내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노래·춤 허용해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8월 이후 일반음식점 등지에서 노래·춤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광주 45건, 전남 13건 등이었다. 광주는 서울(2842건)·경기(2592건)·인천(477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933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형적 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다. 적발된 단란주점 4건의 경우 모두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

적발된 건수 중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 받은 건을 제외한 나머지 338건(36.2%)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시정명령 15건, 영업장 폐쇄 7건 등이었다.

별도의 조례를 통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자체는 광주·전남·대구·서울, 서울시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울산시 중구, 부산시 부산진구 등 총 7곳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

1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과 봉사자들이 해남군 화산면 송평리 송평해수욕장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김양식장 시설물 철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소방관 건강 적신호... 절반이 '건강 이상'

전남 소방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 전체 소방관 중 절반이 '건강 이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안 59.3%, 화순 59%, 담양 57.3%, 목포 54.8% 순이었다.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진(41.2%)이었다.

전년(2017년)보다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난 곳도 8곳에 달했다. 광양소방서는 2017년 대비 건강이상자가 28.9%에서

50%로 21.1%포인트 늘어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화순(15.4%포인트 증가), 영광(10.5%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해남은 '건강 이상' 소방관 수가 21.7%포인트 감소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 실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소방관 정밀건강진단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포인트 늘어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화순(15.4%포인트 증가), 영광(10.5%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해남은 '건강 이상' 소방관 수가 21.7%포인트 감소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 실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최근 5년간 소방관 정밀건강진단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종제 부시장 총선 출마 물건너가나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주시도시공사의 간부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로 꼽히는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증을 모아 전달한 협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부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 8일 이틀간 도시공사 간부 Y씨에게 직원 등을 소환해 정 부시장에게 권리당원증을 모집해 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10일에도 도시공사 직원 등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도시공사 직원들은 지난 6-7월 사이 권리당원 수신행을 모아 간부 Y씨에게 전달했으며, Y씨는 이들을 로부터 받은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정 부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와 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시장은 "30년 공직 생활 동안 당원모집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원·당규에 따라 후보자 경선 전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에게만 총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내년 총선 관련 권리당원 모집 시한은 지난 7월까지였다. 정 부시장은 그동안 내년 4월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출마 예상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 정관계자의 말이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뒀어야 하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피의자 신분이면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명예퇴직이나 사직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부시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2020년 4월 15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명예퇴직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기소 후 재판 일정 등을 가정하면 내년 1월 내 명예퇴직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공원 관련(광주시)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해경, 불법 그물코 조업 중국 어선 잇따라 포

전남 해역에서 허가받은 그물코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적재해 덮개를 씌우지 않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신안군 거제도 남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1.1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98t·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관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께에는 신안군 거제도 남서쪽 46.1km(어업협정선 내측 27.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B호(98t·

승선원 18명)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평균 41.2mm·42.2mm 그물을 각각 30틀(틀당 약25m)과 100틀(틀당 약30m)을 갑판상에 적재하고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공동화장실 바닥에 대변 본 60대, 나무라는 남성에 되레 행패

○...공동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본 60대 이상을 나무라는 남성의 면상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착수.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상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봤는데, 뒤이어 들어온 B(54)씨

가 "그런 짓을 하면 되겠다"고 항의하자 면상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A씨의 행동에 정확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착신 불가 상태"라면서 "조만간 다시 연락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